

이달의 초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의 현황과 과제

노후준비지원제도의 필요성과 현황

| 이소정 |

노후준비서비스 운영 사례와 과제

| 성혜영 |

노후준비의 현황과 과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황남희 |

노후준비수준에 따른 집단 유형화와 함의

| 이해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노후준비서비스 운영 사례와 과제

Implementation Cases and Challenges of Retirement Preparation Services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

정부는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4대 영역의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40개 거점 지사를 통해 진단·상담·교육·사후관리의 4단계 표준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두 주체는 지역노후준비협의체 및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상호 보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서비스 인지도 부족,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과 같은 한계도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며, 각각 특색 있는 서비스를 발전시키되 상담과 교육은 두 주체 간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들어가며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05년 9%에서 2025년을 기점으로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국가데이터처, 2026).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노인 빈곤, 독거노인의 고립 등은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다.

과거의 노후준비가 단순히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재무적 관점’에 치우쳐 있었다면, 현대의

노후준비에서는 은퇴 후 30~40년에 이르는 긴 시간을 어떻게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비재무적 관점, 즉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중심에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자리하고 있다.

노후준비서비스는 2015년 제정 및 시행된 「노후준비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둔다. 특히 이 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노후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노후준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 기관을 중앙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지자체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지자체 중심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구분하여 한국의 노후준비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확인하고, 향후 과제로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본다.

2 노후준비서비스 운영 사례

가. 노후준비 4대 영역

노후준비지원법에서는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가지 영역을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삶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로 구분한다(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2026).

재무 영역은 노후 ‘빈곤’에 대비하는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노후준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다. 은퇴 후 소득 단절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제도를 통해 평생 월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부채 축소나 자산 배분, 지출 통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리스크로부터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어적 재무설계까지

[표 1] 노후준비서비스 영역

영역	주요 개념	서비스 목적
재무(Finance)	노후 생활비, 의료비, 긴급 자금 마련 등 안정적인 경제 기반 구축	연금 자산 최적화, 자산 관리,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지원
건강(Health)	신체적·정신적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수명(건강수명) 연장	식습관·운동 처방, 만성질환 관리, 치매 예방 교육 및 자가진단 연계
여가(Leisure)	은퇴 후 늘어난 자유시간의 생산적·창의적 활용	자원봉사, 취미 다변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대인관계(Relationship)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립 방지 및 가족·이웃과의 소통	부부 대화법, 성인 자녀와의 관계 개선, 은퇴자 커뮤니티 형성 지원

출처: 황남희 외(2024) 등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포함하고 있다.

건강 영역은 ‘질병’에 대비하는 신체적·정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활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여가는 ‘무위(無爲)’에 대비하는 시간의 구조화로 은퇴 후에 주어지는 막대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설계하는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는 ‘고독’에 대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준비하는 것으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막고,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것이다. 특히 은퇴 예정자의 경우 직장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벗어나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정서적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지원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이다. 2026년 현재 공단의 전국 지사 중 40개 지사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노후준비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조직 및 운영 체계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설치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서비스 표준을 고안하고 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 개발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상담과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

[표 2]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거점 지사 및 인력 현황

(단위: 명)

지역본부(거점 지사 수)	정원		
	계	상담사	강사
총계	127	90	37
서울북부 (5곳)	16	12	14
서울남부 (7곳)	22	16	6
경인 (6곳)	19	13	6
대전세종 (6곳)	18	13	5
광주 (6곳)	19	13	6
대구 (4곳)	14	9	5
부산 (6곳)	19	14	5

출처: “노후준비사업 설명자료”,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2025, 국민연금공단, p. 6.

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 시스템 통합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40개의 국민연금공단 거점 지사이다. 여기에서는 민원실을 방문한 고객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진단과 상담, 교육 및 관계기관 연계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2026년 현재 127명의 전문 상담사와 강사가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서 상담사는 ‘노후준비 상담’을 전담하며, 강사는 ‘노후준비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이다.

2) 서비스 프로세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총 4단계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 1단계는 진단, 2단계는 전문 상담, 3단계는 관계기관 연계 또는 맞춤형 교육, 4단계는 사후관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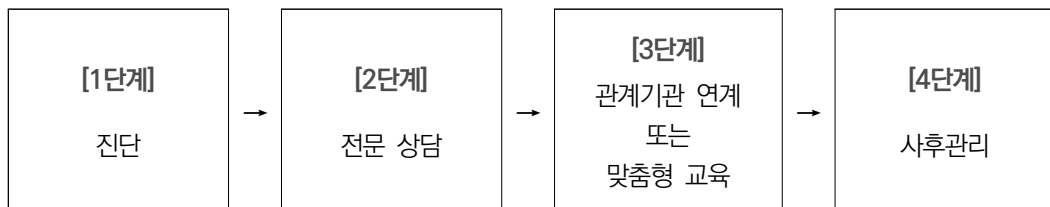
1단계인 노후준비 수준 진단에서는 종합진단지를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4개 영역에 대한 준비 정도를 확인한다.

진단지는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동년배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본인의 준비 수준과 취약 영역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2단계는 전문 상담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1단계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준비상담사가 심층 상담을 한다. 상담 역시 진단 과정과 마찬가지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재무 영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령액 안내와 함께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을 종합한 다층적인 소득보장 설계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은퇴 후 실제 필요 생활비 대비 부족한 자금을 계산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연계하거나 노후준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은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계 기관은 재무 분야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

[그림 1] 노후준비서비스 표준 프로세스



출처: “노후준비서비스 표준 프로세스”, 2026, 국민연금공단, <https://csa.nps.or.kr/main.do>.

공사 등이다. 일자리나 창업을 원하는 경우 노인인력개발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연계한다. 건강 영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있다. 여가 분야는 자원봉사센터와 지방문화원 등과 협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등과 연계한다.

아래 <표 3>은 연계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전문기관 연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연계 서비스도 갖추고 있다.

노후준비 교육은 상담과 함께 중요한 서비스 방법이다. 전술하였듯 총 37명의 내부 전문강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 외부 위촉 강사들도 활용하고 있다. 먼저 거점 지사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외 기업체나 공공기관, 군부대, 복지관 등 교육을 원하는 단체에 강사를 파견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 4단계는 사후관리 단계이다. 진단·상담 후 1·3·5개월 경과자에게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 및 재진단 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실행과제 실천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진단·상담 후 1·3개월 경과자는 연령별로 재무관리, 소비습관,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유용한 정보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5개

[표 3]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의 영역별 종류

기관	제공 서비스	
전문기관 (24)	재무(10)	주택연금, 농지연금, 서민금융 지원 제도, 소상공인 지원 제도, 법률복지 서비스, 여성취업 지원 서비스, 귀농귀촌 지원 제도, 마이홈 주거 상담, 퇴직연금, 노란우산공제
	건강(4)	체력 인증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공의료 복지연계 서비스, 치매상담 전화센터
	여가(7)	자원봉사, 취미·문화 프로그램, 지역문화 프로그램, 자원봉사, 여행지원 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산 트레킹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대인관계(3)	가족정책 서비스, 50+생애상담 및 커뮤니티, 가정법률 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지방 자치단체 (35)	재무(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희망키움통장, 노인일자리사업,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지원 제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장애인 일자리 지원, 마을세무사, 농촌주택개량사업,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건강(14)	치매관리, 금연 클리닉, 구강보건, 일반 건강검진, 노인 독감 예방접종, 노인 실명 예방, 정신건강 상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바우처),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여가(4)	취미·문화 프로그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인관계(5)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출처: “노후준비사업 설명자료”,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2025, 국민연금공단 p. 9.

월 경과자에게는 ‘셀프 재진단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행과제 실천 여부 및 노후준비수준을 재점검하도록 지원한다.

3) 노후준비수준 진단을 위한 디지털 툴의 활용과 심층 재무설계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중 디지털 툴을 활용하는 사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 연금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가 가능하고 공·사 연금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사 연금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직역, 퇴직, 개인, 주택 및 농지연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활용해 간단재무설계를 해볼 수 있으며, 개인의 고유 정보를 활용한 심층재무설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사와 대면한 심층적 재무설계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노후준비서비스 현황

2021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 및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2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개정 전에는 공공기관만이 노

[그림 2] 공·사 연금 통합조회

내연금 알아보기(국민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가입중인 국민·직역·퇴직·개인·주택·농지연금을 한곳에서 확인하여 현재 준비되어 있는 노후자금 상태를 자가 진단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노후소득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보다 풍족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공적연금 연계 신청자는  공적연금연계제도(www.ppsl.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입중인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정보조회를 신청합니다. 신청하기	 조회 정보조회 신청중인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정보를 조회합니다. 조회하기	 철회 정보조회 신청중인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정보조회를 철회합니다. 신청 철회하기
--	---	--

출처: “공·사 연금 통합조회”,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2026, 국민연금공단, <https://csa.nps.or.kr/main.do>.

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서비스 수혜의 저변 확대를 위해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지역센터를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의 표준화된 서비스와 달리 각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즉 초고령 지역, 농어촌 지역, 대도시 밀집 지역 등에 맞춘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특징으로 한다. 이들 지자체는 「노후준비지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 지자체 서비스의 구조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준비서비스는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는 본사업 단계로 들어섰다. 부산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와 인천 고령사회대응센터는 광역센터로 지정되어 있고, 부산 북구와 사상구, 김제, 춘천, 서울 성동구, 부천시와 대전 서구는 지역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해 지정된 센터가 아니라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노후준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독자적인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지자체 산하의 복지관, 평생학습관, 50플러스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을 하나로 묶어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한다. 예산 상황과 시장의 의지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 헬스케어, 지역 특산물 연계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다양한 로컬 서비스를 발굴·집행할 수 있는 유연성과 다양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광역센터의 사례로 인천 고령사회대응센터, 지역센터 사례로 성동구 50플러스센터를 살펴보고,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 하하(HAHA)센터의 사례를 살펴본다.

2) 지자체 사례

① 지자체 광역센터: 인천 고령사회대응센터

인천 고령사회대응센터는 50세 이상 예비 노년층의 성공적인 노후 전환을 돕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맞춤형 생애설계 상담을 시작으로 기존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진로 탐색 및 재취업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산 및 연금 관리 교육을 한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은퇴 후 늘어난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취미 개발과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자원 봉사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가족 간의 갈등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동아리 결성과 커뮤니티 육성도 돕고 있다(양지훈, 2024).

② 지자체 지역센터: 서울 성동구 50플러스센터
서울시에서는 만 40세에서 64세까지의 중장년층을 ‘전환기 세대’로 규정해 노후준비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50플러스 캠퍼스 및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서부·중부·남부·북부 캠퍼스를 비롯해 자치구별로 센터를 두고 있는데, 이 중 성동 50플러스센터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지자체 지역센터이기도 하다.

서울시 50플러스에서는 노후준비 4대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상담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경력을 사회적기업 및 지역 아동센터와 매칭하는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한 생애설계 상담실에 전문 컨설턴트를 직접 채용하여 밀착형 생애설계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임소현, 최계원, 2024). 성동 50플러스센터 역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며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교육사업과의 차이점은 교육 수강 후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 내에 모임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커뮤니티 간 네트워크 활동이나 역량 강화 교육도 지원해 준다는 점이다. 또한 일자리 사업은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센터가 상담과 교육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성동 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관내 초등학교생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돌봄 일자리, 병원 동행 매니저 등의 일 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성동50플러스센터, 2026).

③ 지자체 자체 센터: 부산광역시 하하(HAHA) 캠퍼스 및 센터

부산은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는 특성을 반영해 기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과 차별화된 활동형 신노년층(Active Senior)을 위한 공간인 ‘HAHA센터’를 권역별로 개소하였다. 구별로 사업 내용은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래구 하하센터에서는 동아리실, 다목적실, 북라운지, 공유오피스 등을 마련해

[표 4]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종류와 사업 내용

유형	대표 기관명	사업 내용
지자체 광역센터	인천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생애설계 상담, 교육, 커뮤니티 지원, 일자리 사업, 봉사활동 지원
지자체 지역센터	서울 성동구 50플러스센터	생애설계 상담, 교육, 커뮤니티 지원, 일자리 사업, 봉사활동 지원, 공간 제공
지자체 자체센터	부산광역시 하하센터, 하하캠퍼스	공간 제공, 신노년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 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부대시설 대관

출처: 본문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중장년 및 신노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교육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소외로 인한 노후 리스크 방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노년층 스스로의 재능 기부를 활용한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동래구, 2026).

하하캠퍼스는 대학의 유휴 시설을 활용해 신노년층의 배움과 건강한 일상을 지원한다는 목표하에 202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스포츠 프로그램과 교육 강좌를 운영하며 건강센터를 설치해 건강 측정, 치매 검사, 그 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부산광역시, 2026).

라.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 협력 체계 및 서비스 비교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 간의 연계 협력 체계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 예는 지역노후준비협의체 구성과 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이다.

현재 광역 및 기초 단위 협의체가 운영 중인데, 국민연금공단 지사장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과장, 지역 고용센터장, 보건소장, 지역 대학 평생교육원장 등이 참여하는 지역노후준비협의체로 가동되고 있다. 지역노후준비협의체의 목적은 지역 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 핫라인을 구축하여 주민이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단 한 번에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연계망을 다지는 데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 센터의 성장을 돕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력 양성, 콘텐츠 제공, 전산시스템과 홍보 등에서 이루어진다. 지자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4대 영역에 대한 법정 교육을 하고, 상담과 전산 실무교육을 하며, 상담 기법과 심화 교육을 통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노후준비 상담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지자체 서비스 제공자는 진단·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노후준비 전용 홈페이지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자체 사업을 하는 경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며, 취약 분야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중앙센터의 역할이기도 한다.

검토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준비서비스는 상호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는 상담과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재무설계 상담과 교육에 가장 큰 강점이 있다. 생애설계에 필요한 진단 도구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지자체와 다른 점이다. 지자체의 경우 대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인데, 각 지사를 활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에서는 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봉사활동 운영, 동아리와 커뮤니티 지원도 지자체 사업이 국민연금공단 사업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비교

구분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주요 법적 근거	「노후준비지원법」 제10조	「노후준비지원법」 제15조 및 각 지자체 조례
서비스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를 비롯한 국민 전체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주민, 특히 중장년부터 초기 노년층
조직 인프라	전국 40개 국민연금공단 거점 지사 및 연계 기관	복지관, 자체 센터(50플러스센터, HAHA센터 등), 시니어클럽, 구청, 동사무소 등
재원 구조	보건복지부 국가 일반회계 및 공단 예산	지자체 자체 지방세 수입 및 매칭 펀드(국비+지방비)
서비스 내용	상담 및 교육서비스 중심, 재무설계 상담 및 교육에 강점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코칭 일자리 연계, 여가, 평생학습, 공간 제공, 동아리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협력 사항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지자체 인력 양성, 콘텐츠 제공, 전산시스템과 홍보 지원	

출처: 본문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국민연금공단은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재무 상태를 확인해 주고 노후생활비 준비를 유도할 수 있으나 추가적 근로소득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때 상담 고객을 지자체의 시니어클럽이나 일자리 센터로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원이 창출되도록 보완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는 문화 센터, 건강 웰니스 강좌 등의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개개인의 정확한 다층 연금 분석이나 노후생활비 준비를 위한 상담 능력을 상시 보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자체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하거나 공단 지사로 상담을 의뢰해 재무설계를 받게 할 수 있다.

3 해외 노후준비서비스 사례

인구고령화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기에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노후준비서비스를 발전시켜 왔다.

먼저 영국은 2019년 ‘머니 앤드 펜션스 서비스(MaPS: Money and Pensions Service)’를 설립하여 재무, 연금, 부채 상담을 하나의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MaPS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개인의 재무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 특히 ‘국가 금융역량 전략(National Financial Wellbeing Strategy)’을 수립하여 전 연령대의 금융 이해력 및 노후준비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성혜영, 김아람, 2019).

호주의 호주투자위원회는 ‘MoneySmart’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 노후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충당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MoneySmart’ 사이트를 활용하여 재무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호주 국가 기관인 휴먼서비스부에서는 재무정보서비스담당자를 배치하여 각 지역에서 무료 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다. 휴먼서비스부의 해당 업무 담당 직원들은 강사로 활동하며 지역별로 ‘재무정보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성혜영, 김아람, 2019).

2020년 독일은 연방연금공단(DRV Bund: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내에 통합연금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적·사적 연금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령을 발표하였다. 통합연금조회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은 공적·사적 연금 권리의 현 상태 및 누적된 연금액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독일연금공단, 2026).

싱가포르의 의무저축제도(CPF: Central Provident Fund, 중앙공제기금) 기반 위에 중장년 재교육·여가·사회참여를 연계한 서비스 체계로 재무와 비재무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교할 만하다. 싱가포르의 노후준비 정책은 재무 준비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 설립된 제3연령위원회(C3A: Council for Third Age)가 노년층의 자원봉사, 여가 활동을 총괄하며(Agency for integrated care, 2026), 국가은퇴자아카데미(NSA)와 스킬스퓨처(SkillsFuture)를 통해 평생학습과 직업 재교육을 연계한다(Government of Singapore, 2026).

이들 사례는 한국의 서비스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며, 주로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노후준비에서 재무적 준비를 기본으로 하되 여가와 교육 등 비재무적 관점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4대 영역을 규정하여 다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사례가 세계적인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다.

4 향후 과제

현재의 노후준비서비스는 과거에 비해 성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된다.

먼저 인지도 및 홍보 부족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노후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서비스 역시 정보 접근성이 뛰어난 일부 능동적 계층(Active Senior) 위주로 이용자가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노후준비에 취약한 저소득층, 중년 1인 가구 및 디지털 소외 계층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지자체 간 역할 정립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부

산시, 인천시와 같은 특별·광역시외의 경우 중앙센터와의 다른 자체 사업을 고안해 실시하고 있어 중앙센터의 표준적 모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중앙센터의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예산 지원 없이 지휘 권한을 획득하기란 쉽지 않다. 재정적 여력이 없는 지자체를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른 광역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개선과 이용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홍보물이나 가입 내역 알림에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도록 하며, 지자체 역시 지역 사업을 홍보하면서 공단 거점 지사의 서비스도 포함하여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역량이 갖추어진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인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더욱 격려하되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시스템과 인프라,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광역센터와 국민연금 거점 지사가 협력해 노후준비에 취약한 계층에게 적극적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데이터처. (2026). **장래인구추계**.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2025). **노후준비**

사업 설명자료.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2026). **노후준비**

정보. <https://csa.nps.or.kr/main.do>

독일연금공단. (2026). <https://zfd-r-vorsorgeeinrichtungen.drv-bund.de>

동래구. (2026). **하하센터**. https://www.dongnae.go.kr/index.dongnae?menuCd=DOM_000000503003008000

부산광역시. (2026). **하하캠퍼스**. <https://www.busan.go.kr/hahacampus/index>

성동50플러스센터. (연도 미상). <https://www.50plus.or.kr/sdc/index.do>

성혜영, 김아람. (2019). **국민연금 재무설계 서비스 개선 방안-다층연금소득 강화의 관점에서-** (정책 2019-01). 국민연금연구원.

양지훈. (2024). 인천시 노인의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조사 (정책연구 2024-3).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임소현, 최계원. (2024).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생애설계준비 유형 및 영향 요인 비교 분석** (중장년 정책 Insight 15호). 서울시 50플러스재단.

황남희, 박은자, 이선희, 주보혜, 오신희, 김은지, 하태욱, 성혜영, 박광준. (2024). **2024년 노후준비 실태 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gency for integrated care. (2026). Age Well. <https://www.aic.sg/Age-Well>

Government of Singapore. (2026). Skillsfuture. <https://www.skillsfuture.gov.sg>

Implementation Cases and Challenges of Retirement Preparation Services

Sung, Heayoung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Support for Preparation for Later Life in 2015 and designate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s the Central Support Center for Preparation for Old Age. In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e NPS has provided support in four domains of later-life preparedness: financial security, health, leisure activiti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NPS has developed a standardized four-phase service delivery process consisting of assessment, counseling, education, and follow-up support, which is implemented through forty branch offices nationwide. Municipalities, for their part, provide various services tailored to local conditions. The NPS and local authorities coordinate their efforts through mechanisms such as local old-age preparation councils and information-sharing channels. Nevertheless, structural limitations remain, including insufficient public awareness of the services provided and unclear divisions of responsibility. Addressing these challenges requires stronger efforts to raise public awareness. At the same time, each actor should provide services that reflect its respective areas of expertise while ensuring that counseling and educational services are delivered in a complementary manner.